

개성공단 재가동 해도 우울한 입주기업들

과거 지원받은 5700억 반납해야... 추가대책 절실

비대위, 7번째 방북 신청서 제출
상환의무 있는 대출 형태 지원금
'피해기업 두번 죽이는 꼴' 우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 시설점검을 위해 정부가 오는 16일 방북을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

개성공단 재가동 분위기가 연초부터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이 재가동할 경우 과거 입주기업들은 최소 5700억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당시 공단을 강제로 폐쇄한 후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2017년 말까지 기업들의 투자 자산·유동자산 등에 대해 지원한 5833억원 중 상당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돈이 '조건 없는 지원금'이 아닌 상환의무가 있는 '보통·대출금' 형태여서 자칫 피해기업들을 '두번 죽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중 경제협력(경협)보통금이 3086억원으로 가장 많고,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지원금도 17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내 시설점검 등을 위해 오는 16일 방북을 위해 이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후 정부가 현지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해 지금까지 기업들에 지원한 액수는 총 5833억원에 달한다. 투자자산은 개성에 있는 토지, 공장건물, 기계장치 등을, 유동자산은 제품 생산을 위해 두고 온 원부자재 등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투자자산 지원 3945억원, 유동자산 지원 1764억원, 근로자위로금 124억원이다.

기존대출 상환유예, 세금 납부 연장, 보증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자산 지원에는 경협보험 가입사에 게 준 보험금 3086억원 외에도 미가입 기업에게 지급한 859억원의 특별 피해지원금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기업이 받은 보험금이나 지원금은 향후 공단 재개시 기업들이 다시 입

주를 원하면 반납해야 한다. 경협보험 규정에 따르면 가입 기업이 보험금을 받으면 소유하고 있던 공장이나 기계설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국가 재산이 된다. 향후 기업이 보험금을 반납해야 공장 등의 소유권이 국가→기업으로 바뀌어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되고, 투자자산에 대한 피해액을 확인하고도 2년이 더 지난터라 건물이나 기계장치관련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험금 반환시 이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협 보험금뿐만 아니라 특별 피해지원금 859억원, 유동자산 관련 지원금 176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사실상 정부가 개성공단 강제폐쇄 후 생활고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준 124억원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등 피해금액 및 정부 지원 현황> (단위:억)

구분	실질피해액(2016년기준/협회추산)	정부 지원금(2017년 말현재)	반납여부
투자자산	5936억	3945억(경협보험금 3086억 포함)	반납
유동자산	2452억	1764억	반납
근로자위로금	—	124억	—
위약금	1484억	—	—
개성 현지 미수금	375억	—	—
1년간영업손실(2016년)	3147억	—	—
영업권 상실 피해	2010억	—	—
총액	1조5404억	5833억	—

/자료=통일부 및 개성공단기업협회 자료 재가공 *추산 피해액은 2016년 말 기준으로 2017-현재까지 추가 피해액은 미포함

의 위로금을 뺀 5709억원이 '반환금'인 셈이다.

물론 정부가 앞서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에 특별대출, 보증, 상환유예, 납부연장 등의 명목으로 준 금융·세제 혜택도 '공돈'이 아니다.

비대위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막대한 피해에 대해 공단이 재개되면 반환해야 하는 경협보험금 및 긴급 대출로(기업들이)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했지만(지원금이)기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국민들이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기업들 생존을 위해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의 이날 방북 신청은 공단 폐쇄 후 7번째다. 신청 규모는 1사1인으로 산정해 총 179명이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사건을 전제로 "시설점검이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위한 설비 점검을 위해 개성 방문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이번에도 개성공단 재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건 잘 알지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신한용 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 기업인과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은 어렵지 않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석대성 수습기자 bada@metroseoul.co.kr

더페이스샵, 에이본 중 광저우회사 인수

"3년간 취업 힘들 것... 올 일자리 15만개 목표"



현금성 300억 등 793억 투입

LG생활건강의 자회사 더페이스샵이 글로벌 화장품 회사 에이본(AVON)의 중국 광저우 공장 지분 100%를 약 793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현금성 자산 약 300억원을 제외한 실제 인수가는 약 493억원이다.

에이본 광저우 공장은 약 7만9000㎡(약 2만4000평)의 부지에 건물 면적 5만㎡(1만5000평)인 대규모 화장품 공장으

로, 연간 1만3000톤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 FDA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cGMP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 및 색조 화장품과 헤어 및 바디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더페이스샵은 이번 인수로 자체 제품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에이본과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에이본의 중국사업과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에이본 광저우 공장의 직원들 또한 인수 후 모두 승계하기로 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홍 부총리,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고용동향 기대 못미쳐 책임감 느껴
올 공공기관 약 2.3만명 채용 계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2021년까지 3년은 취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면서 "올해 일자리 15만개를 만드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가한 청년취업 준비생들과 소통 라운드테이블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12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 기대에 못 미쳐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66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8월 3천명 증가 이후 저점을 찍고 9월 이후 점차 확대됐던 취업자 증가 폭은 제조업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4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는 "제가 베이비붐 세대고 여러분은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에코 세대"라면서 "2022년까지 에코 세대가 많이 늘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구직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고, 그 뒤로는 줄어들어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은 취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에코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로 2022년까지 대거 20대 후반이 돼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정부는 이에 대비,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그래서 정부가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절박

감이 있다"면서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15만개 만들기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온갖 정책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게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민간처럼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올해 2만3천명 정도 뽑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삼바 '분식회계' 압박에 바이오산업 주춤

>> 1면 '韓 경제 비상구...'서 계속

◆정부규제·정치공작까지 이중고

기업들은 내부에서도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에도 지배구조개편과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 등이 바쁘게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산분리 압박은 삼성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다.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3% 이내로만 보유하도록 하는 보험법 개정안. 만약 통과되면 삼성생명도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7.92%를 처리해야만 한다. 자칫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공세는 삼성을 끈질기게 위기로 내모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지

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무리하게 '분식회계'로 규정하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대외적인 신뢰도 훼손은 물론, 국내 바이오산업을 주춤하게 했다.

정의당은 8일 이재용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2013년 삼성물산에 자택 공사 비용을 대납해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삼성물산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로, 이 부회장과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 실제 자택 공사 비용은 이 부회장이 결제했으며, 일반적인 일이라고 삼성물산은 덧붙였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3일 대한상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주일일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리하게 재계를 압박한 셈이 됐다.

/김재용 기자 juk@

연봉 3083만원 근로자 4인가족 세금 '0'

통계청, 급여 3% 초과 의료비 공제
총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인적공제 등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

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3인 가족(자녀1)은 근로자

총급여가 2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독신자는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연합뉴스